

# 일본경제 주간동향(5.28-6.3)

## 핵심내용

### 1. 경제일반

-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 일본 정부는 2017.4월로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을 이보다 2년 반 연기하여 2019.10월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베총리가 국회 회기 말인 6.1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발표함.
  - 증세로 인한 소비 냉각의 우려 등으로 증세 재연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을 세계경제에서 찾고 있는 점은 우려되며(닛케이신문), 증세 재연기는 재정건전화 및 사회보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아사히, 마이니치신문), 증세 재연기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대응책 제시가 필요하다(산케이신문) 등의 언론반응
- (일본정부, 2016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 동 기본방침은 ①당면 경제과제와 개혁 기본방향, ②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③경제·재정의 일체적 개혁, ④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 4대 부문으로 구성
  - (세부 실행과제) △명목 GDP 600조엔 경제 실현을 통한 국민소득 확대, △결혼·출산·육아지원 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 강화,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혁명 등 성장전략 내실화, △예산집행의 효과성(wise spending) 제고 등
  - (경제성장 및 재정재건 양립 목표 견지) 추가 소비증세 재연기 결정(2017.4월→2019.10월)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목표는 견지하였으나 지난해 설정한 중간목표(2018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1% 미만 달성)는 삭제
  -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개산요구 검토에 앞서 엄밀한 사전평가(공공서비스 혁신 성과 등)를 시행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중점 추진
  - (언론반응) 증세 연기로 1억총활약플랜 등에 대한 재원 불투명, 骨太方針 실효성 없어(아사히, 마이니치신문), 재정건전화 계획과 관련 중간목표가 언급되지 않아 재정건전화 실현가능성 의문(요미우리신문), 일련의 시책에 대한 분야별 검증 필요(닛케이신문) 등

##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4월 소비자물가동향)** 4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바, 지난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도 지난달과 동일한 0.3% 수준
- **(2016.4월 고용동향)** 후생노동성이 5.31 발표한 2016.4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04p 상승(2개월 연속)한 1.34로 1991.11월 이후 24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 **(2016.4월 소비지출 동향)** 총무성이 5.31 발표한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당 소비지출이 29만 8,520엔으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는 전년 동월대비 0.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총무성은 ‘소비에 약한 움직임이 보인다’ 고 판단

	5.30(월)	5.31(화)	6.1(수)	6.2(목)	6.3(금)
환율(엔/달러)	111.35	111.13	110.05	108.95	108.74
환율(원/100엔)	1,071.49	1,072.88	1,085.57	1,089.25	1,089.47
닛케이평균주가(증가:엔)	17,068.02	17,234.98	16,955.73	16,562.55	16,642.23
장기금리(%)	-0.115	-0.120	-0.115	-0.115	-0.105

- **(환율/주가)** 엘런 美 FRB 의장의 향후 수개월 내 금리인상 시사 발언(5.27)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5.31 발표된 미국 경기지표에서 소비자 체감경기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엔화가 다소 상승하였으며, 뉴욕외환시장에서는 6.3 미국의 고용통계에서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달러 대비 엔이 장중 106엔대를 기록
  - (닛케이평균주가) 주초 엔화약세·달러강세로 인해 17,000대를 회복하였으나, 그후 엔화강세·달러약세 진전,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관한 아베 총리의 회견(6.1)에서 구체적 경제대책 제시 미흡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

# 1 경제일반

## 1.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

### 1.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 결정

- 일본은 2017.4월로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을 이보다 2년 반 연기하여 2019.10월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베총리가 국회 회기말인 6.1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발표
- 아베총리는 5.30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고무라 자민당 부총재, 니카이 자민당 총무회장, 이나다 자민당 정조회장과 각각 만나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연기할 방침임을 정식으로 전달
- 또한 같은 날 저녁 재연기에 반대해 온 아소 재무대신과 약 3시간 반 회담을 진행한 끝에 아소 재무대신이 재연기를 수용하기로 결정
  - 그간 아소 재무대신은 재연기를 실시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재연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중의원 해산 및 중·참의원 동시선거 없이 증세 재연기 결정
- 아베총리는 재연기의 필요성에 대해 5.30 개최된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G7이 새로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적당한 때에 모든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고 설명
-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닛케이는 6.22 공시, 7.10 투표를 관측) 이후 임시국회에 증세 재연기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

### 2.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의 경제적 효과

#### 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따라 증세로 인한 일시적인 성장률 하락 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연구소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예정대로(2017.4월) 시행되면 2017년 실질 GDP 성장률이 0%대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증세가 연기된다면 소비침체가 억제되어 GDP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 으로 분석
- IMF도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도에 -0.1%로 전망하였으나, 선진국 중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일본뿐이어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
- 한편 2019.10월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으로서 각종 수요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업종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소비가 회복되고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순환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론
- 다만, 세계경제 동향이 불투명하여 해외경기가 둔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바, 일본경기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도 우세

#### 나. 시장에 미칠 영향

-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의 사실상 결정이 알려지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후퇴하여 5.30 도쿄주식시장에서는 닛케이평균주가가 17,000엔대를 회복(종가 17,068엔)
- 그러나 증세를 연기하게 되면 재정규율 완화 등을 이유로 재정신인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채가 매각되어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장기금리 상승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바, 증세 재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 **(주가에 대한 영향 : 장기적으로는 도움)** 당지 경제전문가(사카가미 미쓰마루 SMBC닛코증권 주식전략담당 수석)는 5.30의 주가상승은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보다 엔화약세가 배경이 된 측면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그간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2017년도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가 주가전망에 있어 불확실성의 요인이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기 때문
- 증세연기로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활동이나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장기금리 상승은 예상하기 어려운바, 실제로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그다지 없을 전망
- (환율에 대한 영향 : 엔/달러 환율에는 제한적) 당지 경제전문가(우치다 미노루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증세 재연기로 인해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고 해도 재정악화를 우려한 엔 매도가 당장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금리에 미치는 영향 : 재정 리스크를 의식한 변동 가능성) 당지 경제전문가(마쓰자와 아타루 노무라증권 금리전략담당 수석)는 채권시장에서는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는바, 5.30 장기금리에서는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으며, 향후 1개월간 0% 부근~사상최저 수준이었던 -0.135% 사이에서 움직일 전망
-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는 본질적으로는 재정리스크 확대에 의한 국채매각·장기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바, 향후 돌발적으로 재정리스크를 의식한 장기금리 급등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

### 3. 재정건전성 확보 및 사회보장 강화의 향방

#### 가. 쟁점 1 : 재정건전화 목표의 지속가능성

- 일본정부는 2017.4월 시행되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전제로 하여 재정건전화 목표(①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8년도에 GDP 대비 1% 정도로 축소 → ②2020년도에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를 제시하였으며, 5월말-6월초 각의결정이 전망되는 경제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骨太方針)에서도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를 견지

- 일본정부는 증세를 연기한다고 해도 2020년도 세수에 증세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삭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
  - 다만, 2018년도 목표(GDP 대비 1% 정도로 적자를 축소)는 달성이 곤란할 전망
- 그러나 증세를 연기하게 되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
  - 소비세 증세를 통해 3.5조엔 정도 세수가 증가(다이와총연의 추산 결과)한다면, 증세연기로 인해 2.5조엔분\*이 세수에서 새로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
    - \* 증세 재연기로 인해 경기하강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가 1조엔 증가
  - 또한, 재무성은 2019.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2020년도에 증세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증세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개인소비가 급감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인세, 소득세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 나. 쟁점 2 : 사회보장의 향방

- 일본정부는 고령화의 진행을 고려하여 10%로 증세를 단행할 경우 얻어지는 4조엔 이상의 세수 중 1.3조엔분을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던 상황
  -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 50만명분 확대하기 위한 운영비(1천억엔), △저소득 고령자의 개호(간병)보험료 부담경감 등(5천억엔),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6만엔의 급부금(5,600만엔),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단축(25년→10년)(300억엔) 등에 적어도 1.5조엔 필요
- 또한 아베총리는 세수증가분을 1억총활약 관련 시책에 활용하겠다고 표명해왔으나, 안정된 재원없이 사회보장만 강화한다면 재정건전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

## 다. 쟁점 3 : 경감세율 도입 여부

-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식료품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은 증세와 동시에 도입될 방침
- 경감세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정관련법이 지난 3.29 통과되었는바, 증세를 2019.10월로 연기하게 되면, 참의원 선거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재차 세제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소비세 증세와 경감세율 도입 개시일을 연기할 필요
  - 법안은 개시일만 수정되며,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야당측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연기할 경우 경감세율 도입 백지화에 관한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경감세율은 증세 이후 소비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며, 이미 경감세율 도입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상황

## 2. 소비세 증세 재연기 관련 언론보도

### 1. (요미우리) ‘디플레이션 탈출’ 우선 설명 책임 다하라, 양원 동시선거 연기는 타당한 판단

- 현 경제 상황하의 증세는 소비심리의 냉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증세 연기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을 세계경제에서 찾고 있는 점은 우려됨.
  - 현재 일본의 경기 회복은 담보상태이며, 내수의 핵심인 개인소비가 2014.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침체 지속중
  - 한편, 중국 등 신흥국 경제 감속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하방압력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견해는 소수로, 유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경기 개선으로 추가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모색중인 점을 고려하면 리먼사태를 예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

- 아베 총리가 동 견해를 제시한 것은 ‘리먼사태 및 동일본대지진급의 사태가 없는 한 예정대로 증세하겠다’ 는 과거 주장 때문이며,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비판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
-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경제의 선순환’ 실현이 미진한 상황 및 세계 경제 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할 것
- 또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및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세 연기 기간을 2년 반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
- 증세 연기기간 2년 반 설정 이유에 대해, △2019년도 가을에는 도쿄올림픽 특수가 시작되는바 그 이전의 증세에는 우려가 존재,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2018.9월말) 전의 증세 회피, △2019년 봄의 통일 지방선거·여름의 참의원 선거 등 중요 선거에 대한 영향 축소 등이 목적이라는 견해 존재
- 여당내에는 증세 연기시, 양원 동시선거를 단행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2016.7월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바 자민·공명 양당은 국민 의사를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중의원선거에서 여당이 2/3의 의석을 밀돌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가 동시선거 연기를 결정한 것은 타당한 판단

## 2. (아사히) 소비세 증세 재연기, 아베 총리 또 도망치는가

- 선거와 관련하여 증세를 두 번이나 연기하려는 총리의 판단은 증세를 선거·정국과 독립시킴으로써 재정건전화 및 사회보장 확충을 추구하려는 ‘세금과 사회보장 일체개혁’ 의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것임.
- 또한 2014.11월의 증세 연기 표명시 언급했던 ‘재정건전화라는 깃발을 내리는 일은 결코 없다.’ , ‘(증세를)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를 2년 반 연기(증세 실시 2019.10월)한 이유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총리 임기중(2018년 가을 종료)의 증세를 회피, △2019년 봄, 여름의 통일지방선거 및 참의원선거에 대한 영향 방지 목적이 있다는

## 견해가 존재

- 리먼사태급 및 동일본대지진 수준의 경기혼란에 빠졌을 경우 증세 연기는 불가피하나, 최근 일본 국내 경기가 미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리먼사태급은 아님.
  - \* 최근 4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은  $\Delta 1 \sim +1\%$  대로 일진일퇴중(연율환산), 이에 반해 리먼사태 직후의 성장률은  $\Delta 15\%$ , 동일본대지진 직후  $\Delta 7\%$  이상
  -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증세 연기의 근거로 세계경제를 언급한 것은 아베노믹스는 순조로우나 신흥국 등 해외경제가 불안한바,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할 목적
-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일본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로, 아베노믹스의 한계와 병폐를 직시하고 제도수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완화 수단으로써 일본은행이 거액의 국채매입을 지속하면 정부의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으며, 추경예산이 공공사업확대 및 소비환기책 중심이 되면 경기는 일시적으로 부양되나 재정악화에 빠져 미래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

### 3. (마이니치) 아베 총리 증세 재연기, 세금 논의를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

- 금번 소비세 증세 재연기는 세금·사회보장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총리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임.
  - 2014.11.18. 증세 1년 반 연기 결정시,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증세 가능한) 경제상황을 만들겠다’ 고 단언
- 또한, 금번 재연기는 근거의 설득력이 부족하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해외 경제상황에 책임을 전가)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대해 ‘리먼사태 전과 유사’, ‘위기에 빠질 큰 위험에 직면하였다’ 고 강조하였으나, 이는 여타 정상과 상이한 인식으로 영국·프랑스 정상은 ‘위기는 아니다’ 라고 언급

- \* 오히려 디플레이션 탈출 불투명, 본격적인 경기 회복 약세 등을 보이는 일본 국내 경제상황이 문제이며, 증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할 필요
- (사회보장에 미칠 영향) 본래 소비세 인상(8%→10%)을 통해 △사회보장 확충에 1.5조엔을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 ‘1억총활약사회’ 계획에 따라 보육교사 및 간병인의 임금 개선만으로도 2,000억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 (재정 재건에 대한 영향) 일본의 국가채무는 1,000조엔 이상으로 선진국중 최악의 수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표명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실현 요원
- (정치에 대한 신뢰 손상) 금번 판단은 참의원 선거 직전에 내려진바, 2014년의 중의원 해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제도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한 것
- \* 당초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은 사회보장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12년 자민·공명·민주당의 3당에 의해 합의된 것이나, 현재 총리가 재연기 방침을 결정, 민진당도 2017년의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틀은 붕괴 직전
- \* 또한 증세가 2년 반 연기 될 경우, 증세 실시시점(2019.10월)은 2019년 통일지방선거 및 참의원선거 이후이며,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 후인바,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대응
- 소비세 증세 재연기의 총리 방침은 여당내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되어 아소 부총리 겸 재정대신이 난색을 표명·재연기시 중의원 해산을 촉구하였고,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소비세에 관한 방침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논의가 필요함.

#### 4. (산케이) 소비세 증세 재연기, 총리는 국민에 설명책임 다하라

-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이 디플레이션 탈출 실패를 막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일 수는 있으나, 동 판단에 전제로써 △ ‘증세 가능한 경제 환경 구축’ 의 수행 실패를 아베 총리가 인정하고, △원인 설명, △아베노믹스의 부족점에 대한 보강책 제시가 필요함.

- 이러한 과정 없이 증세 재연기의 이유를 해외경제 리스크에서 찾는다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재생을 위한 처방도 잘못될 우려
- 또한, 증세 연기 시 일본 정부의 재정재건목표(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및 사회보장재원 확보 등에도 큰 과제가 남는바, 목표달성 및 재원 마련을 위한 확실한 수단 제시가 필요함
-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의 경우, 소비세 증세 재연기 후에도 유지하는 가능하나, 중간목표(2018년도의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1% 규모로 감축)는 포기가 불가피한바, 새로운 목표 명시 필요
- 아베 총리는 2014.11월 증세 연기 표명 시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 고 단언한바 있으며, 증세 재연기는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인 만큼 큰 정치 책임을 동반하는바, 개인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미진한 가운데 향후 경기진작 방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함.

### 3. 소비세 증세 재연기 관련 설문조사

#### 1. 주요 기업 사장 대상 넛케이 설문조사

- 아베총리의 소비세 인상(8→10%) 2년 반 연기(2019.10월 실시) 표명을 계기로 넛케이신문사가 6.2 ‘사장 100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소비 침체 방지 등을 이유로 증세 재연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자가 37.7%에 달함.

\* 주요기업 사장(회장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15사가 회신

- (증세 재연기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8.8%), △평가하는 편이다(28.9%), △잘 모르겠다(35.9%), △평가하지 않는 편이다(21.1%), △평가하지 않는다(5.3%)

- \* (긍정적 평가 이유) △소비 침체 방지 위해(95.3%), △세계경제 전망에 강한 불안감 존재(53.5%), △구마모토 지진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등(복수응답)
- \* (부정적 평가 이유) △재정건전화 지연 우려(93.3%), △다음 세대의 부담 가중(73.3%), △사회보장 확충에 악영향 등(복수응답)
- (증세 재연기의 일본 경기에 대한 영향) △긍정적(77.6%), △부정적(11.7%)
- (자사 경영에 대한 영향) △긍정적(40.1%), △영향 없음(56.2%)
-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한 영향) ‘부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편’ 이라는 응답이 총 90%에 육박
- \* 야스나가 타쓰오 미쓰이물산 사장은 증세 재연기 판단은 타당했다고 평가하면서 ‘세출 삭감 및 재정 재건 시책의 꾸준한 실행’ 을 주문
- \* 히사메 아키히로 도레 사장은 ‘사회보장제도 등이 확충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면 소비도 증가한다. 그 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유보하는 것’ 이라고 지적
- (증세 연기 기간에 대한 평가) △잘 모르겠다(60% 이상), △타당하다(18.6%)

## 2. 교도통신 전국 전화 설문조사

- 한편 교도통신사가 6.1-2간 전국 전화 여론조사(제 1회 트렌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8.0%를 차지한 반면, 소비세 증세 재연기는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아니라는 응답(47.5%)이 우세
-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수정 필요(46.5%), △완전한 방향 전환 필요(11.5%), △현상유지 필요(18.3%), △더욱 확충할 필요(16.3%) 등 약 58.0%에서 부정적인 평가
-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대한 평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아님(47.5%), △경제정책의 실패(43.1%), △잘 모르겠다·무응답(9.4%)으로 의견이 분분

- (아베 내각 지지율) △지지(49.4%), △非지지(41.3%), △잘 모르겠다·무응답(9.3%)

## 4. 일본정부, 2016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결정

### I. 핵심 내용

- 금번 기본방침은 ①당면 경제과제와 개혁 기본방향, ②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③경제·재정의 일체적 개혁, ④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 4대 과제로 구성
  - (개혁 기본방향) 대내외 경제불안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G7 정책공조 합의사항 적기 이행을 위해 구조개혁과 함께 신수요 대응활동 강화
  - 특히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 도모를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한 “新세개의 화살”을 일체적으로 추진
- (세부 실행과제) △명목 GDP 600조엔 경제 실현을 통한 국민소득 확대, △결혼·출산·육아지원 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 강화,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혁명 등 성장전략 내실화, △예산집행의 효과성 (wise spending) 제고 등
- (경제성장 및 재정재건 양립 목표 견지) 추가 소비증세 재연기 결정 (2017.4월→2019.10월)에도 불구,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목표는 견지하였으나 지난해 설정한 중간목표(2018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1% 미만 달성)는 삭제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재정 재생계획에서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의 착실한 이행”으로만 명기하고 구체 방안은 미제시
-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개산요구 검토에 앞서 엄밀한 사전평가

(공공서비스 혁신 성과 등)를 시행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중점 추진

- 주요 분야별 개혁 진척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및 유연성 확보

## II. 상세내용

### I 당면 경제과제와 개혁방향

#### 1. 일본경제 현황과 과제

- (현황)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래 기업 수익 확대, 고용·소득 여건 개선 등 견고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유가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고조되고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 개선세도 미흡한 상황
- (과제) 대내외 경제불안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G7 정책공조 합의 사항 적기 이행을 위해,
  - 인구 감소·고령화, 생산성·혁신역량 제고, 노동시장 개선 등 구조 개혁과 함께 잠재시장 발굴을 통한 신수요 대응이 중요한 과제
  - 또한, “경제재생없이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기존 자세를 견지 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wise spending)을 지속 강화
- (구마모토 지진대응) 조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2016 본예산에 더해 추경예산(구마모토 지진복구 등 예비비 창설)을 편성
  - 이재민 생활지원금 지급, 응급가설주택 건설, 라이프라인 인프라 및 관광시설 복구, 고용유지 지원금\* 확충 등을 차질없이 이행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휴업 및 근로자 사외파견 등을 통해 고용 유지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

##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

- (新 미래전략 추진)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한 “新세 개의 화살”을 일체적으로 추진
  - (강한 경제 구축) 명목 GDP 600조엔 경제 실현을 통해 생산성 혁명·이노베이션 촉진→일자리 창출·고부가가치 서비스제공→산업구조 변화·생활의 질 향상→국민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육아지원·사회보장 내실화) 출산율 1.8명 회복, 간병이직 제로사회 구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촉발된 미래불안 요인 제거
  - (추가 소비증세 재연기) 소비세 추가 인상(8%→10%) 시기를 2.5년 후로 연기하되(2017.4월→2019.10월), 2020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는 견지
- (지역경제 활성화) 아베노믹스 정책효과(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전국적 파급을 위해 동경 과밀 해소, 젊은 세대의 정상적인 취업·결혼·육아 실현, 지역경제 과제 해결 등 “로컬 아베노믹스” 집중 추진

## 3. 600조엔 경제 실현 정책방향

- (新경제사회시스템 구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 등을 통한 소득분배 촉진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이노베이션·일하는 방식 개혁 등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실질 2%, 명목 3% 성장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서는 제도·규제개혁 추진 강화,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개혁, 공공서비스의 산업화, 의료·개호분야 자원의 선택과 집중 등 정부역할이 매우 중요

## 4. 원자력재해 부흥 · 재생계획

- (폐로 연구개발 추진) 민 · 관협력을 통해 폐로 · 오염수 대책 강화, 폐로 연구 개발 및 인재육성, 풍평피해 불식, 중간저장시설 정비, 방사성 오염 폐기물 처리 등 조속히 추진
- 후쿠시마지역 재생을 위해 “후쿠시마 · 국제연구산업도시(innovation coast) 구상” 관련 사업별 실용화 추진에서 관계 부처가 적극 공조

## II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 1. 저출산 · 고령화사회 대응

#### ① 결혼·출산 지원

- 젊은 세대가 정상적인 결혼, 출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 등 출산 · 육아정책 지원, 캐리어 교육 강화, 젊은 층 · 육아세대 주택부담 경감대책 등 추진

#### ② 아동·육아 지원, 빈곤어린이 대책 등

##### ① 육아지원 체제 내실화, 육아환경 개선

-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정비, 다자녀 세대 지원, 지역 육아지원 거점 및 이용자 지원, 가족지원센터 정비, 소아 · 주산기의료체계 내실화 등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는 빈교실 등 지역 인프라 우선 활용, 방과 후 학습 · 체험활동 확충 등 육아지원 서비스의 양적 · 질적 서비스 제고(소비증세 재원 활용)
- 3세대 동거 독려를 위한 주택보조금 지급,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정비 관련 소득세 특례조치 시행, 지역주거기능 재생추진사업 등 추진

## ② 보육인재 대책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인재육성, 과도한 노동관행 시정 등

## ③ 교육환경 정비, 빈곤대책 강화

- 교육기회 불평등 및 빈곤 대물림 고착화 해소를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 미등교·중퇴대책 마련, 젊은 층 자립지원(의료·복지·교육·취업 전단계에 거친 종합지원),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추진

## ③ 여성·고령자 취업 촉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 ① 고령자 활약 촉진 (생애현역사회 실현)

-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등 추진

### ② 여성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중립적 세제 혜택·사회보장제도 구체화

- 연금기능강화법을 통한 대기업 피용자보험의 적용 확대, 단시간 정사원제도 조성금(커리어업 조성금) 활용대책 강화 등

#### ◇ ‘단시간 정사원제도 장려금(커리어업 조성금)’

→ 단시간 정사원제도를 신설하여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① 기존 근로자(파트타임·유기계약 근로자)를 단시간 정사원으로 전환하거나 ②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육아·개호목적 적용 제외)

※ 지급액: 대상 근로자 1인당 15만엔(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20만엔)

\* 지급 대상자가 한부모 가정일 경우 10만엔 가산

\* 다만, '14.3.1~16.3.31까지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단시간 정사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상 근로자 1인당 25만엔(중소기업 30만엔) 지급

- 「여성활약 가속을 위한 중점방침 2016」에 따라 텔레워크(Telework) 등 근로 유연화, 남성 가사·육아참여 독려, 여성 채용관리 정보 공개, 여성간부 육성 등 추진

### ③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정사원 전환,

연차유급휴가 취득 촉진

#### ④ 개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인재 확보

- 개호시설 정비 및 국유지 활용도 제고, 간병이직 해소를 위한 개호 서비스 수요 조사, 치매시책추진종합전략 실현, 지역포괄지원센터 기능 강화, 인재확보·처우개선, 개호휴업제도 활성화 등 추진

#### ⑤ 장애인 등 활약 지원

- 치료·직업생활 양립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 등

### 2. 성장전략 내실화

#### ① 생산성 혁명 가속

##### ① 인재육성

- 전략적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제도화 검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탁월대학원(가칭) 구체화, 고도전문학교 교육 고도화 등 교육연구거점 강화
- 탁월연구제도 등을 통해 초중교육단계에서 우수인재 체계적 육성

##### ② 교육재생(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 세계 최고 학력 달성·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액티브 러닝 학습 촉진, 학교 지도체제 내실화 및 교원역량 제고, 팀학교 운영체제 구축, 창조성 교육 등 추진
- 내국인 해외유학 장려, 외국인 연구자 채용 확대 등 국제화 추진
- 유아교육 무상화 관련 재원 확보, 무이자 장학금 확충, 소득연동 변제형 장학금제도 도입 등 실시

##### ③ R&D 투자 촉진(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IoT · 빅데이터 ·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 책정, 산학연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GDP대비 R&D 투자(민+관) 비중을 4% 이상으로 확대
  -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 환경 정비, 운용인재 확보,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 지적재산전략 실시,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등 추진
- ④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서비스산업 challenge program)
- 『일본서비스대상』 우수사례 보급, 중소기업자 IT투자 촉진, 서비스규격 창설 · 보급,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드론 화물배송 등 추진

## ② 新유망 성장시장 창출·확대

### ① 2020 동경올림픽 · 파라림픽 수요 대응

- beyond 2020 프로그램을 통한 일본문화 매력 및 첨단기술 해외 발신, 동경 유니버설 디자인 쇼케이스화 등 추진

### ② 문화예술 · 스포츠대국 실현

- 문화예술 콘텐츠 · 디자인 등 관련 자원 활용도 제고, 국립문화시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애스포츠 사회 실현, 장애인 스포츠 진흥, 국제 스포츠 외교 활성화, 성장 산업화 등 추진

### ③ 공공시설 등 인프라 운영권 민간개방 실현(PPP · PFI 추진 액션플랜)

- 지역 민간사업자 안전발굴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 · 활용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사업규모 21조엔 수준으로 확대

### ④ 관광산업 기간산업화

- 관광산업 규제완화 검토, 민관펀드를 활용한 관광지 재생 · 활성화, 세계수준의 DMO(관광지역만들기추진법인: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 구축, 정부 주도 MICE 유치 등 추진

- 컨세션 등 하네다공항 기능 강화, 지방공항 LCC 수용환경 정비, 관광 크루즈선 입항 확충, 방일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세관(Customs) · 출입국관리(Immigration) · 검역(Quarantine)체제 정비

### ⑤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

- IT 활용 등 농업혁신 창출, 6차 산업화 추진, 농업개혁, 낙농 · 축산업 성장산업화, 자조금 제도(Check-Off Syatem) 도입 검토
- 삼림자원 순환 이용, CLT(직교적층목재) 등 목재수요 창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 양식업 추진 등

## ③ 해외 성장시장 진출전략 적극 추진

### ① TPP 활용, 新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등

- 『新수출대국 컨소시엄』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JETRO 등 지원기관이 적극 공조하여 중견 ·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종합적 · 체계적 지원, 유통산업과의 연대 강화, 제도 정비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 ② 對日직접투자 촉진

- 총리 · 각료 톱세일즈 추진, 재외공관과 JETRO · 지자체 연대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현지 안전창출 · 유치활동 강화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J-GoodTech) 등을 활용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추진계획 가속, 대내 투자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③ 『일본 브랜드』 전략적 수출 · 관광 촉진

- ‘쿨재팬 관계부처 연락 · 연대회의’ 및 재외공관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문화컨텐츠 · 일식 등 전략적 수출 · 관광테마 설정 및 발신
- 인프라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외홍보, 현지 인재육성 추진
- 『농림수산업 수출력 강화전략』에 따라 해외판로 개척, 도매시장 수출거점화, 해외 판매거점 설치, 신선도유지를 위한 수송기술 보급

#### ④ 해외 우수인재 유치환경 정비

-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영주권 신청 체류기한 5년→3년 단축)』 신설, 국내 취업희망자와 채용기업간 매칭 지원, EPA 의거 외국인 개호복지사 수용 확대,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등 추진

#### ④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원

- 일본판 DMO·지역상사를 통한 지역브랜드 확립, 지역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구축,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활용, 『지방창생대학』 설립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IT전문가 파견, 중소기업등 경영강화법 적극 이행,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경영상담 지원 강화

### 3. 개인소비 회복

#### ① 임금·가치분소득 증가 등

- 최저임금을 매년 3% 인상, 2020년까지 전국평균 1,000엔 수준 달성
  - 이를 위해 소득확대촉진세제 활용,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종합 지원
- 젊은 층·육아세대를 위한 주택부담금 경감대책 마련(빈집, 민간 임대주택 활용), 친족 근린생활시 공단주택(UR) 임대료 할인

#### ② 잠재적 소비수요 발굴

##### ① 고령사회 신수요 발굴

- 건강·의료서비스 창출육성·이용촉진 도모, 모바일·ICT 활용 의료 개호지원·건강관리, 자동차 충돌회피 브레이크 표준 장비화 등 첨단기술 보급

##### ②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여행소비 활성화

- 전략적 비자발급 요건 완화, 관광자원 정비, 내국인 연차유급휴가 취득환경 개선, “고향휴일(지역별 휴일)” 지정,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화장실) 확충

### ③ 부동산 활용

- 지자체 주택개량자금 지원, 부동산펀드(REITs)시장 기능 강화 등

### ④ 소비심리 개선

- 프리미엄 상품권 및 여행권, 육아지원 바우처 등 발행, 소비자 피해방지 및 구제대책 등 강화

## 4.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기반 확보

### 1 외교·안전보장·방위

- 외교정책의 3대 핵심 축(미·일 동맹 강화, 주변국 관계 강화, 경제 외교 강화) 전략적 이행, 안전보장 및 테러대책 관련 정보수집·분석 기능 강화, 재팬하우스 홍보문화거점의 효율적 활용, 재외공관 인력 정비 등 외교 수행체제 확충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령탑 기능 강화, 방위생산 및 기술기반 강화, 해외 방위장비·기술협력 등 추진

### 2 소비자 안전행정 기반구축

- 소비자사고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식품 표시 철저 준수, 경품표시법·특정상품거래법 등 엄격 집행, 거래법 정비, 물가관련대책 추진,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지향경영 독려, 고령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핫라인 적극적 홍보

### 3 자원에너지

-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효율 개선(경제성장과 CO<sub>2</sub> 배출억제 양립), 중소기업 친환경사업 지원, 넷제로에너지주택 보급, 최상급에너지효율 기준제도(top runner) 확충, 수소사회 실현, 고정가격매입제도 개정 등

#### 4 지구환경 공헌

- 혁신적인 환경에너지 기술개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저탄소기술 국제보급 추진, 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및 국민부담 억제 양립,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국제기관 연대추진, 해양쓰레기대책 강화

### III 경제 · 재정의 일체적 개혁 추진

#### 1 경제재생·재정건전화 양립 목표 견지

- 2020년도 명목 GDP 600조엔 경제 실현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 · 재정재생계획』에서 제시한 세입 · 세출 동시개혁을 착실히 이행, 예산집행의 효과성(wise spending) 제고

#### 2 선진·우수사례 보급, 중앙·지방 연대 강화, 예산 투명성 준수

##### ① 공공서비스 개혁 우수사례 보급 촉진

- 『건강증진 · 예방서비스 플랫폼』 추진 사례, 지자체 업무 민간위탁 및 ICT화 등 공공서비스 개혁성과 등을 공유하고 정책운용에 적용

#####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연대 강화

-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채널 확충, 현장 중심의 상향식(Bottom up) 접근 및 지원방안 강구

##### ③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개혁 추진상황 및 성과관련 정보공개, 정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심포지엄 개최 등 홍보활동 강화

### ③ 예산집행의 효과성(wise spending) 제고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전략적 자원배분 추진
- 의무지출(현금·현물급부)에 대해서도 건강수명 연장·주민 서비스 광역화, IT화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국고 지출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자율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 설정 후, 주기적으로 평가

### ④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관리시스템 구축(PDCA 사이클)

-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재정관리시스템(Plan-Do-Check-Act)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개혁공정표 및 정책항목별 성과목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따라 진척상황 등을 지속 관리
-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을 동시 점검하고, 상향식(bottom up) 예산 편성방식(사후 평가→반영)으로 개혁성과를 극대화

### ⑤ 주요 분야별 개혁 추진방향

#### ① 사회보장

- 의료비 적정화 기본방침 추가 검토, 지역간 의료비 격차 심화요인 분석 및 의료·개호 종합추진대책 추진, 암검진 및 특정검진 수진율 제고, 보험자 기능 강화, 고령자 자립지원을 통한 급부 적정화 등

#### ② 사회자본정비 등

- 사회자본 스톡효과 최대화 및 평가기법 구체화·실무운영 방안 확립, 건설생산시스템 제고·인력 확보, Compact City 성과지표 개발, 노후 인프라 집약화·복합화 가이드라인 책정 등

### ③ 지방행정 · 재정개혁, 분야 횡단적 과제

- 최상급에너지효율제도(top runner) 도입취지 · 경비산정 기준 등 공표 · 홍보, 공공시설 집약화, 지자체 IT화 ·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 ④ 교육정책 등

- 저출산 대응 예산 효율화, 민간자금 활용 촉진, 예산 중점화, 정책 평가관리(PDCA) 철저 준수, 중장기 법정교원 수 산출 등

### ⑤ 세입개혁, 자산 · 채무 압축 등

- 과세기반 확대(세수확보), 조세 · 사회보험료 징수 적정화, 국제 과세제도 재구축, 국유지 활용도 제고, 불필요한 자산 처분 등

## IV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 1 경제재정 운영방침

- G7 정상회의 합의내용에 따라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금년 가을 중 종합적인 경제안정대책 등을 과감히 추진
- 임금 · 가처분소득 상승, 규제 개혁, 소비 · 투자 독려, 성장전략 이행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목표 2% 달성 실현을 기대

### 2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 2017년도 예산편성시, 경제재정자문회에서 개산요구 검토에 앞서 엄밀한 사전평가 시행
- 건강증진, 행정서비스 IT화 · 광역화, 선진 개혁사례 공유, 중앙 · 지방정부간 연대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

-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중점 추진
- 주요 분야별 개혁 진척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및 유연성 확보

## 5. 골태방침 등 각의결정에 대한 일본 주요언론의 평가

### 1. 당지 주요 언론의 평가

#### 가. 아사히신문 ( “증세연기 재원 불투명” )

- 아베총리는 6.2 2016년도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骨太方針’ ), 1억총활약플랜, 성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을 각의 결정함.
- 다만, 骨太方針에서 재정건전화(2020년도에 기초재정수지를 흑자전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또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워졌음.
  - 소비세 증세 재연기가 결정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의 실현이 더욱 요원해졌으며, 이번에 각의 결정된 1억총활약플랜 등에서 제시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또한 그간 일본정부가 제시해 온 2018년도 재정건전화 중간목표 (2018년도에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1%(5-6조엔) 정도로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일본 내각부가 1월 발표한 추산에서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2017.4월 실시하고, 동시에 명목 3%의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가 약 6.5조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1억총활약플랜에서 보육교사·간병인의 임금인상, 개인소비 진작을 위한 프리미엄상품권 지급 등을 제시하였으나, 재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나. 요미우리신문 ( “骨太方針, ‘중간목표’ 언급 안 해, 재정건전화 불투명” )

-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따라 1억총활약플랜 등에서 제시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증세 재연기로 인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는바, 향후 목표수정 등 재검토 가능성이 있음.
- (시책 추진 위한 세수 재검토) 骨太方針에서는 1억총활약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활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세수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언급 회피
  - 당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
    - \* 도쿄증권거래도 1부에 상장된 기업에서 아베노믹스 도입 이후 2016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수익감소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기초재정수지 재논의 필요성 거론) 骨太方針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15년도 기준 16.6조엔에 달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도에 흑자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와 관련, 기초재정수지 목표가 거품경제 시절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초부터 실현이 어려웠다는 견해가 우세
  - 또한 이번 骨太方針에서는 중간목표(2018년도에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1% 정도로 축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세 증세를 재연기함에 따라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
  - 이와 같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생산성 향상 위해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병행) 한편, 성장전략에서는 IT 및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4차 산업혁명’ 의

추진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2020년 30조엔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그러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탈 시간급’ 제도 관련 법안이 6.1 마감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용 관련 구조개혁은 더디게 진행

#### 다. 마이니치신문 ( “骨太方針 실효성에 의문, 세수증가 보장없어” )

- 骨太方針에서는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보육·간병정책 및 개인 소비 진작방안 등 세출증가로 이어지는 시책이 제시되었으나, 소비세 증세를 재연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재원의 충분한 확보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베노믹스의 성과인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엔화강세가 수출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바, 세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또한 아베총리가 경기 ‘하강’ 을 경계하여 소비세 증세를 재연기하였는바, 骨太方針에서 제시한 낙관적인 전망과 모순됨.
- 아울러 아베총리가 6.1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사회 보장 강화시책 중 일부를 선행적으로 시행하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관련 언급이 骨太方針에는 없음.
- 세수증가분 또는 세출감소분 등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사회보장 강화 시책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화는 더욱 후퇴할 우려
- 한편, 재정건전화 목표와 관련, 骨太方針에서 중간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대해 내각부는 목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향후 세출 효율화 및 세수증가 등 관련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중간목표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것으로 전망됨.

#### 라. 닛케이신문 (일련의 시책에 대한 분야별 검증)

## □ 고용·노동 부문 : 인력부족 해소 시급

- 최근 3년간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상회하여 실업률은 감소하고, 유효구인배율은 증가함.
- 그러나 시장이 성장전략의 핵심내용으로 여기는 노동개혁에서는 여전히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탈 시간급’ 등에 관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2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규제개혁 부문 : 기업의 진입장벽 여전

- 아베총리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중간한 상황임.
  - 농협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生乳 유통제도와 관련, 지난 3월 규제개혁 회의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지정단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농림축 의원 등의 반발로 인해 결국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한다’의 수준
  - 또한 농지보유 관련 규제로 인해 민간기업의 농업분야 진입이 어려운 상황도 여전
  - 한편, 일반주택에서의 민박의 도입과 관련, 여행업계를 배려하여 영업일수 제한을 조건으로 민박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신규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

## □ 경쟁력 강화 부문 : 산업 신진대사 진전 지연

- 성장전략에서 ‘2020년까지 IT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선진사례 50건 이상 창출’,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운전 실현’ 등 수치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또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창업이 적은데 반해 중소기업을 보호

하기 위한 방안 등이 잘 되어있어 산업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실효세율(2016년도부터 29%대)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행하는 등 기업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 구축이 필요

#### □ 사회보장 부문 : 어려움은 회피하고 분배를 중시

- 일본정부는 출산율 1.8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편중된 예산분배의 개선에는 여전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3만엔을 지급하는 등 분배를 중시함.
- 반면 고령자에게 일정 수준의 사회보장 부담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억제하는 등의 개혁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통이 따르는 개혁은 회피하고 있음.

#### 마. 넷케이신문 ( “아베정권은 개혁의 추진체제 쇄신 필요” )

- 일본정부는 규제개혁실시계획, 성장전략, 骨太方針, 1억총활약플랜을 각의 결정하였으나, 난립하는 정책회의에서 정책문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이며, 근로방식 개혁, 성장전략과 같이 테마가 중복되어 정책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함.
-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개혁 중 ‘민박’ 은 세부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고, ‘농업분야 개혁’ 에서는 결론이 보류되었음.
- 또한 속도감도 떨어져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에서 기술혁신이 예상되나 지금과 같이 1년에 한번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는 규제개혁이 지연될 것임.
- 아울러 ‘국가전략특구’ 에서 성과가 나타난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필요할만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나, 목표설정이 잘못되면 업계의 반발이 큰

‘암반규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쉬워 낙관할 수 없는 상황

- 한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성장전략의 개별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세금,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을 일원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
- 또한 정책회의의 정리·축소를 진행해야 할 것인바, 테마를 우선 규제 개혁과 사회보장 개혁에 맞추고 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개혁의 추진 체제를 쇠신하여 정권의 경제정책을 재확립해야 함.

#### 바. 도쿄신문(“경기의존, 자원 뒷받침 없어”)

- 일본정부는 6.2 骨太方針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시책을 제시하고, 자원은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확대 및 세출억제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함.
- 이와 관련, 아베총리가 6.1 경기둔화 리스크에 대비해야한다면서 소비세 증세의 재연기를 표명하였는바,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큰 세수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위험성도 거론되고 있음.
-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 지적이 많음.
- 2014년도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50조엔에 비해 약 4조엔 증가하였으나, 이는 금융완화에 따른 엔화약세/주가약세로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로 엔화강세/주가약세가 진행된 올 초 이후 세수증가가 둔화
- 骨太方針에서는 2020년도 재정건전화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세 증세 재연기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음.
- 이와 관련, 아베총리가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올 가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바, 자원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임.

## 2. 아베노믹스에 대한 당지 전문가 평가

-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 70점)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은 평가할만하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이노베이션 부문에서는 시책, 성과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특구 인정이 지연
- (야시로 나오히로 쇼와여자대 특임교수 : 65점) 규제개혁의 경우 내용이 부족한데, 보육 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기준, 주택 용적률 완화 등 알기 쉬운 내용이 제시될 필요
- (유모토 켄지 일본종합연구소 부이사장 : 60점) 유효구인배율, 완전실업률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의 개혁, 재택근무 확대 등 근무방식 개혁을 강화할 필요
-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 30점) 사회보장 관련, 대기아동 대책 등 여론의 비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임시방편적 시책이 많았으며, 소비세 증세 재연기로 인해 재원도 불안한 상황

##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6. 2016.4월 소비자물가동향

#### 1. 핵심내용

- 4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
  - 지난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도 지난달과 동일한 0.3% 수준
-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Delta$ 12.6%)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5%), 교양오락용 내구재(9.2%) 등은 상승

## II. 상세내용

- 일본 총무성은 2016년 5월 27일 ‘2016년 4월 전국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발표
  - 총무성 통계국은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일본 정부 및 일본은행은 3가지의 지수 중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활용
    - \* 아베노믹스의 ‘향후 2년내 2% 물가상승률 달성’ 목표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의 2% 상승을 의미
- 4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
  -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
  -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15.4	5	6	7	8	9	10	11	12	‘16.1	2	3	4
지수	103.3	103.4	103.4	103.4	103.4	103.4	103.5	103.4	103.3	102.6	102.5	102.7	102.9
전년동월비(%)	0.3 (0.0)	0.1	0.1	0.0	△0.1	△0.1	△0.1	0.1	0.1	0.0	0.0	△0.3	△0.3
전월비(%)	0.3	0.2	0.0	0.0	0.0	0.0	0.1	0.0	△0.2	△0.7	0.0	0.1	0.3

\* ( )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효과 제외

- 4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지난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도 지난달과 동일한 0.3% 수준
  -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12.6%)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5%), 교양오락용 내구재(9.2%) 등은 상승

- 에너지 구성품목 중 전기요금( $\Delta 9.9\%$ ) 및 도시가스요금( $\Delta 16.8\%$ )이 하락하였으며,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4.3% 하락

\* 석유제품 중 등유는 전년 동월 대비 26.8% 하락하였고, 가솔린은 16.0% 하락

## 7. 2016.4월 고용동향

### 1. 2016.4월 고용동향

#### 가. 유효구인배율 결과

- 후생노동성이 5.31 발표한 2016.4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04p 상승(2개월 연속)한 1.34로 1991.11월 이후 24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 \* 전국 공공직업소개소의 구직자 1인당 구인수
- 다양한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바, 구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취업지역별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005.2월 조사 집계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1을 상회(도쿄 1.41, 최고(후쿠이) 1.94, 최저(오кина와) 1.01)
- 고용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규 구인수(월계열)는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한 89만 4,530명을 기록하였으며,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요식·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증가
  - 교육·학습지도업 +8.2%, 숙박·요식·서비스업 +8.0%, 의료·복지 +6.9%, 도·소매업 +5.8%, 정보통신업  $\Delta 4.5\%$ , 생활관련 서비스업·오락업  $\Delta 0.6\%$  등
- 정규직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도 0.85로 2004.11월 조사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그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구인 증가가 구인배율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정규직의 고용환경에서도 일정 수준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

## 나. 완전실업률 결과

- 총무성이 5.31 발표한 2016.4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3.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완전실업자수(원계열)는 전년 동월대비 10만명 감소(71개월 연속)한 224만명을 기록
  - ‘근무지 또는 사업 사정에 의한 이직자’가 2만명 감소하였으며, ‘자발적(본인사정) 이직’이 1만명 증가
- 취업률은 57.8%로 전년 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명 증가한 6,396만명
  - 정규직이 전년 동월대비 81만명 증가한 3,375만명, 비정규직이 23만명 증가한 1,962만명이었으며, 주요 산업별로는 ‘도·소매업’(29만명 증가), ‘의료·복지’(17만명 증가) 등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46만명 감소한 4,445만명

## 다. 언론평가(닛케이신문)

- 엔화강세, 구마모토 지진 등 기업이 고용을 기피할만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 수준의 유효구인배율 및 낮은 실업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다만, 고용지표는 2014.4월 시행된 소비세율 인상(5→8%) 이후에도 개선세에 있으나, 개인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약세를 지속
  - 세계경제에는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안정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일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소비 회복이 관건
- 소비가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가계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확대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아베정권은 고용정세 호조를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표개선을 경기회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규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 2. 고용정세 개선이 경기에 파급되지 않는 이유(닛케이신문)

- 후생노동성의 4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0.04p 상승한 1.34를 기록하면서 24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전국 유효구인배율이 처음으로 1을 상회하였으나, 오히려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일본경제 성장에서 걸림돌로 작용

### 가. 구인·구직 미스매칭

- 유효구인배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 실업률은 경기 후행지표로 인식되나, 유효구인배율은 경기 동행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6.4월 제조업의 구인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한데 반해 비제조업(교육·학습지원업 8.2% 증가, 숙박·요식·서비스업 8.0% 증가, 의료·복지업 6.9% 증가 등)에서는 구인이 크게 증가
- 비제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구인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일부 업종에서 구인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

### 나. 고용이 여성, 고령자 중심

- 고령자 및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구인배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로 작용
- 대형 마트 및 슈퍼에서 고령자 및 여성의 시간제 고용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4월에는 고용자수가 5,679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만명 증가하였으며, 이중 여성(55만명)이 남성(46만명)을 상회

- 다만, 2015년도 실질임금이 전년도 대비  $\Delta 0.1\%$ 를 기록, 물가상승을 임금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개인소비에서도 영향이 나타났으며, 총무성이 발표(5.31)한 4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0.4% 감소를 기록
- 정규직 확대 등 고용정세가 더욱 개선되지 않는 한 소비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 현재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의 영향이 유효구인배율 및 실업률 개선에서도 발생
- 취업지역별 구인배율이 2005.2월 조사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1을 넘었으나, 오키나와를 제외하면 고치, 가고시마, 홋카이도, 아오모리 등 지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구직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도시에 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아 지방의 구인배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 24년전(유효구인배율 1.34)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약 8,600만명이었으나, 2016.4월에는 7,600명으로 약 1천만명 감소
- 당지 경제전문가(미와 타카시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 아베노믹스로 인한 구인증가에도 기인하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

### 8. 2016.4월 소비지출 동향

- 총무성이 5.31 발표한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당 소비지출이 29만 8,520엔으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는 전년 동월대비 0.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총무성은 ‘소비에 약한 움직임이 보인다’ 고 판단

- ▲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 관련 지출 △11.5%, ▲피복·신발 △10.4%, ▲가구·가사용품 △5.7%, ▲교통·통신 △3.4% 등에서 감소
- 소비지출이 플러스를 기록했던 2월은 윤년 등 특수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8개월 연속 감소로도 해석 가능
- 한편, 근로자 가구의 실수입은 가구당 48만 98엔으로 실질 1.0% 증가(2개월 연속)를 기록

## 9. 환율/주가

	5.30(월)	5.31(화)	6.1(수)	6.2(목)	6.3(금)
환율(엔/달러)	111.35	111.13	110.05	108.95	108.84
환율(원/100엔)	1,071.49	1,072.88	1,085.57	1,089.25	1,089.4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068.02	17,234.98	16,955.73	16,562.55	16,642.23
장기금리(%)	-0.115	-0.120	-0.115	-0.115	-0.105

- (엔/달러 환율) 엘런 美 FRB 의장의 향후 수개월 내 금리인상 시사 발언(5.27)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5.31 발표된 미국 경기지표에서 소비자체감경기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엔화가 다소 상승하였으며, 6.3 뉴욕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통계에서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달러 대비 엔이 장중 106엔대를 기록
- (닛케이평균주가) 주초 엔화약세·달러강세로 인해 17,000대를 회복하였으나, 그후 엔화강세·달러약세 진전,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관한 아베 총리의 회견(6.1)에서 구체적 경제대책 제시 미흡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

/끝/